

현안과 과제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나요?”

- ‘행복하다’는 응답, 1년前 대비 소폭 상승



 현대경제연구원

< 요약 >

■ 국민행복 증가

- (일반적 행복감 증가)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행복하다’는 응답이 1년前 40.5%에서 1년後 41.5%로 소폭 증가
 - ‘보통이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고, ‘행복하다’는 응답은 41.5%로서 두 번째로 많았고,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 8.7%보다 훨씬 많았음
 - ‘행복하다’(41.5%)는 응답률은 20대, 미혼, 여성, 고소득자, 고학력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행복감 증가)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행복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행복하다’는 응답률은 21.8%로서 2012년 12월말(17.6%)이나 2013년 6월말(17.4%)에 비해 소폭 증가
 - ‘경제적 행복감’은 ‘일반적 행복감’과 달리 40대, 기혼, 전업주부,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국민행복’ 관련 설문 조사

- (행복한 이유, 행복하지 않은 이유) 행복한 이유로는 ‘인간관계’(39.5%), ‘건강’(28.0%), ‘일’(12.2%), ‘여가’(10.7%), ‘경제적 여건’(9.3%) 때문이라고 했으며,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여건’(41.4%)이 가장 많았음
 - ‘인간관계’(39.5%)가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응답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졌으며, ‘경제적 여건’(9.3%)의 응답률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짐
 -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경제적 여건 부족’(41.4%)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1년 전에 비해 행복 수준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58.0%였으며, ‘더 좋아졌다’(24.7%)가 ‘더 나빠졌다’(17.3%)보다 더 많음
 - ‘노력한 만큼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78.4%에 달했음
- (경제적 고통) 경제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분야는 ‘노후 불안’(20.3%)이었으며, ‘채감물가’(18.5%), ‘자녀 양육·교육’(15.8%), ‘일자리’(14.6%), 소득분배(12.2%), ‘주택시장’(9.6%), ‘가계부채’(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행복감 제고 과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경제 살리기'(30.5%)와 '복지 확대'(16.2%)라고 응답
 -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우선 과제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 살리기' 30.5%, '복지 확대' 16.2%, '물가관리' 15.1%, '안전한 사회' 14.3%, '사교육부담 완화' 8.6%, '사회통합' 8.4%, '부동산시장 활성화' 7.0%의 순으로 답변함
- (복지 재원 조달)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은 '고소득자 중심 증세'(40.5%)과 '지하경제 양성화'(34.8%), '세출 구조조정'(18.2%)과 '세율 인상'(6.5%)의 순으로 답변하여, 누프(NOOMP)현상은 1년전과 비슷
 - 본인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율 인상'(전체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은 가장 나중(4순위)에 응답(6.5%)하여, 복지를 위한 세금 인상에 거부감이 상당함
- (선별적 복지 선호)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보편적 복지'(26.2%)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선별적 복지'(73.3%)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남
 - 선별적 복지(73.3%)에 대한 응답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졌으며, 기혼, 여성, 전업주부와 자영업자,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중산층 복원 과제) 중산층 복원을 위한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 38.7%, '가계부채 부담 해소' 20.1%,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완화' 19.2%, '고용 안전망 강화' 11.7%, '주거 관련 부담 완화' 10.4%의 순으로 답변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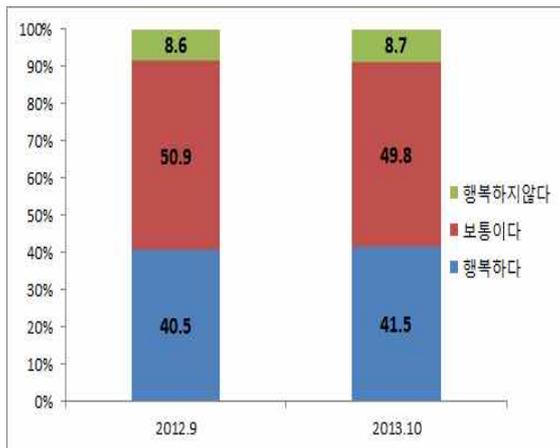
- 첫째, 행복감의 소폭 증가는 최근 경기선행지수 개선 등 경기회복 추세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둘째, 행복감 제고를 위해 경제 살리기와 경제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함
 - 60세 이상 고령층의 낮은 행복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
- 셋째, 행복감 제고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는 노후소득 개선, 체감물가 관리,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 완화, 직업훈련 등 고용 안전망 강화가 필요함
- 넷째,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선별적 복지'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복지서비스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함

1. 국민행복 증가

○ (일반적 행복감 증가) '행복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41.5%¹⁾로서 1년 전(2012년 9월말)²⁾의 40.5%에 비해 소폭 증가

- “귀하는 지금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보통’이라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행복하다’ 41.5%, ‘행복하지 않다’ 8.7%의 순이었음
- ‘행복하다’(41.5%)는 응답률은 20대, 미혼, 여성, 고소득자, 고학력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4.5%로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행복하다’는 응답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46.3%로 가장 높았고, ‘블루칼라’의 경우 32.3%로 가장 낮았음. ‘행복하지 않다’(평균 8.7%)는 ‘자영업’이 15.4%로 가장 높았음
 -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행복하다’는 응답률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임. (※ 100만원 미만 18.2%, 100-200만원 35.4%, 200-300만원 40.4%, 300-400만원 39.9%, 400-500만원 47.9%, 500만원 이상 53.5%)
 - 대도시지역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행복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 일반적 행복감 추이 >



< 연령별 행복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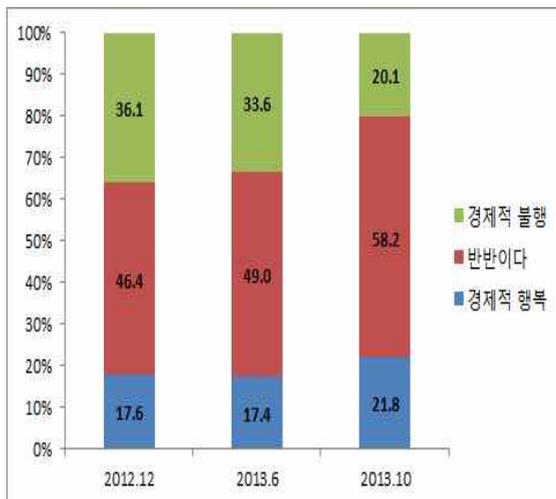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1) 현대경제연구원은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 동안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09임.
 2) 2012년9월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709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68임.

○ (경제적 행복감 증가) '경제적 행복감'(21.8%)은 2012년 12월말(17.6%)이나 2013년 6월말(17.4%) 조사 결과에 비하면 소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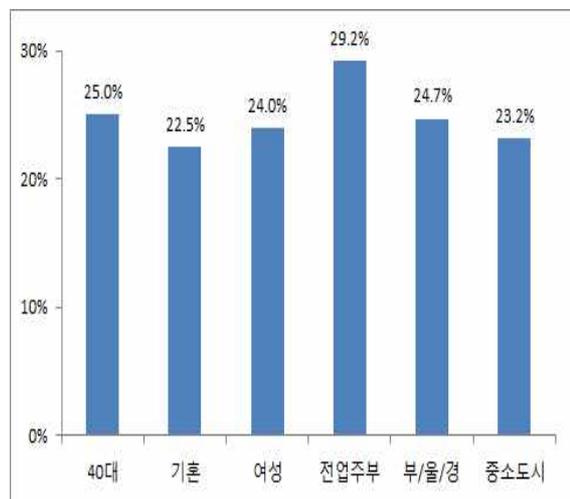
- “귀하는 지금 경제적으로 행복하신가요?”라는 질문에 ‘반반’이라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행복하다’ 21.8%, ‘행복하지 않다’ 20.1%의 순
- 경제적 행복감(21.8%)은 일반적 행복감(41.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2012년 12월말(17.6%)이나 2013년 6월말(17.4%)에 비하면 소폭 증가
- ‘일반적 행복감’(41.5%)이 20대, 미혼, 여성, 화이트칼라,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난 것과 달리, ‘경제적 행복감’(21.8%)은 40대, 기혼, 전업주부, 중소도시에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경제적 행복감’이 25.0%로 가장 높고, 50대의 경우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20.1%)는 응답률이 30.1%로서 크게 높았음
 - 직업별로 보면, 학생(32.9%)과 전업주부(29.2%)의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편이고,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자영업자(30.9%)와 블루칼라(25.0%)가 높은 편임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지역과 중소도시에서 ‘경제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나며,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행복감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그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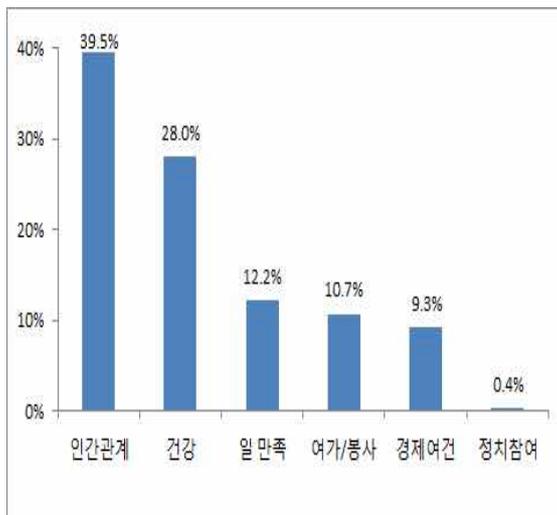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부/울/경’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2. '국민행복' 관련 설문 조사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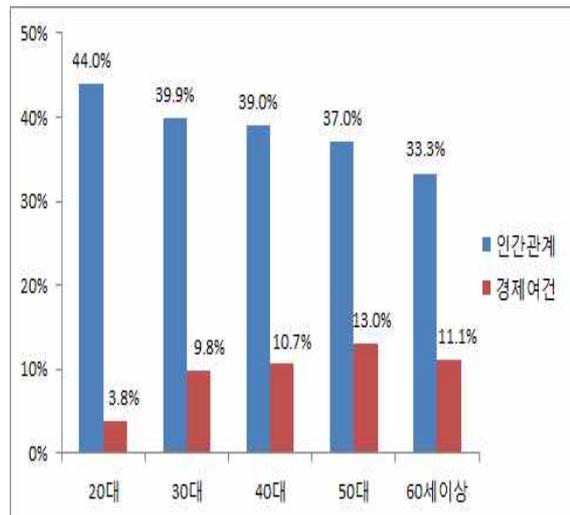
- (행복한 이유)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인간관계'(39.5%)와 '건강'(28.0%)을 가장 많이 들었고, '경제적 여건'(9.3%)이라는 응답은 예상보다 높지 않았음
-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인간관계'(39.5%)와 '건강'(28.0%) 때 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직장과 일에 대한 만족'(12.2%), '여가 및 봉사'(10.7%), '경제적 여건'(9.3%), '정치적 참여'(0.4%) 등
 - '인간관계'(39.5%)에 대한 응답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게 나오고, '경제적 여건'(9.3%)에 대한 응답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옴
 - '행복한 이유'로서 20대는 '인간관계'(44.0%)를, 30대는 '직장과 일에 대한 만족도'(15.0%)를, 50대는 '경제적 여건'(13.0%)과 '여가'(14.8%)를, 60대는 '건강'(38.9%)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함
 - 직업별로 보면, 학생들은 '인간관계'(45.6%)를 행복의 요건으로 가장 중시하며, 자영업자는 '건강'(36.9%)이 '인간관계'(32.0%)보다 더 중요하며, 전업주부는 '경제적 여건'(15.2%)을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시

<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인간관계/경제여건의 연령별 응답률>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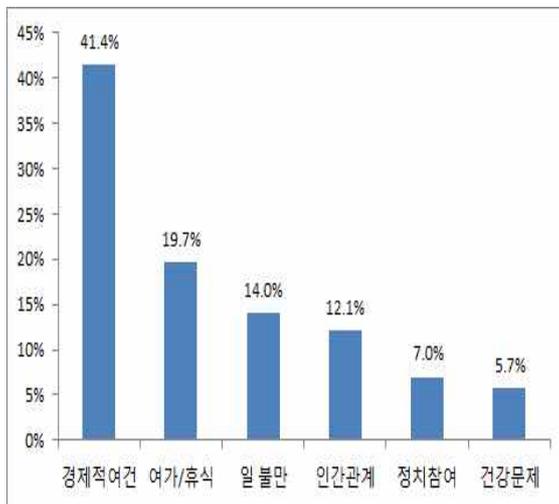
3) 현대경제연구원은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 동안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09임.

○ (행복하지 않은 이유)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경제적 여건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았음

-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경제적 여건 부족'(41.4%)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여가/휴식 부족'(19.7%), '직장과 일에 대한 불만'(14.0%), '인간관계'(12.1%) 등의 순이었음

· '경제적 여건 부족'(41.4%) 때문이라는 응답은 '60세 이상'(53.8%), '자영업자'(51.2%), '서울'(46.9%), '100만원 미만' 소득자(57.1%), '중졸'(54.5%)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음.

<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경제적 여건의 연령별 응답률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1년 전과 행복감 비교) "1년 전에 비해 더 행복해지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58.0%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다'(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24.7%,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17.3%로 나타남

- 행복감이 1년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8.0%로 가장 많았으며, '더 좋아졌다'(24.7%)는 응답이 '더 나빠졌다'(17.3%)는 응답보다 더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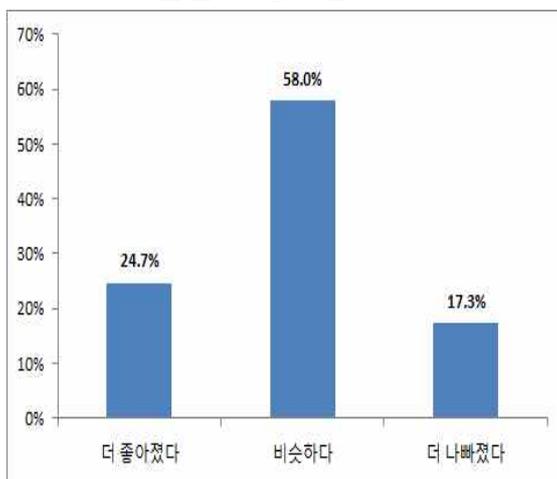
· '더 좋아졌다'(24.7%)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31.3%)에서 가장 높았고, 직업별로는 '학생'(29.1%)과 '화이트칼라'(28.9%)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 수준별로는 4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높았음

○ (행복의 성취 가능성) 응답자의 78.4%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자신이 노력한 만큼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78.4%로 가장 많았고, ‘아니다’ 20.0%, ‘잘 모르겠다’ 1.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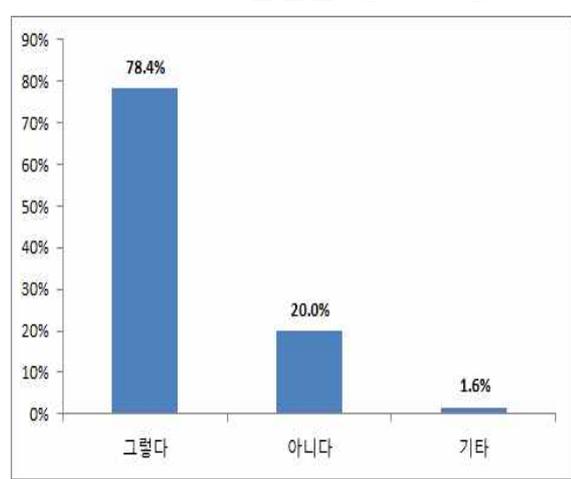
- ‘노력한 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응답(78.4%)은 20대, 미혼, 학생,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대학원졸 이상 고학력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노력한 만큼 더 행복해질 수 없다’는 부정적 응답(20.0%)은 50대, 기혼, 자영업자,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고졸 출신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1년전과 행복감 비교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스스로 노력한만큼 행복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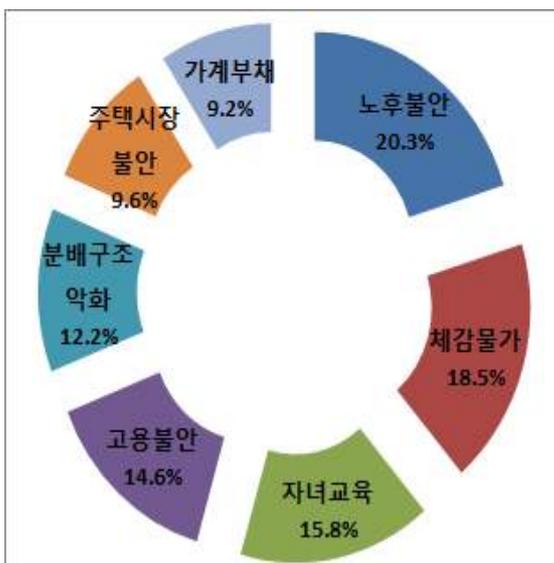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경제적 고통) 경제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분야는 ‘노후 불안’(20.3%)과 ‘높은 체감물가’(18.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연령별로 그리고 직업별로, 결혼여부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드러냄

- “경제적 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분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노후 불안’(20.3%)이 가장 많았고, ‘높은 체감물가’(18.5%),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담’(15.8%), ‘일자리 불안’(14.6%), 소득분배구조 악화(12.2%), ‘주택시장 불안’(9.6%), ‘가계 부채’(9.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는데, 20대는 '일자리 불안', 30대와 40대는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담', 50대와 60세 이상은 '노후 불안'을 들었음
 - 20대는 '일자리 불안'(27.5%)과 '높은 체감물가'(23.8%)의 부담이 가장 컸음
 - 30대는 '자녀 양육· 교육'(19.5%)과 '체감물가'(15.9%)의 부담이 가장 컸음
 - 40대는 '자녀 양육· 교육'(25.0%)과 '노후 불안'(22.1%)의 부담이 가장 컸음
 - 50대는 '노후 불안'(25.3%)과 '높은 체감물가'(16.7%)의 부담이 가장 컸음
 - 60대는 '노후 불안'(30.5%)과 '높은 체감물가'(22.4%)의 부담이 가장 컸음
- 결혼 여부별로, 직업별로, 지역별로도 '경제적 고통'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음
 - 결혼 여부별로 보면, 미혼은 '일자리 불안'(24.7%)과 '높은 체감물가'(23.3%)를, 기혼은 '노후 불안'(22.1%)과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담'(19.8%)을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변함
 - 직업별로는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분야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일자리 불안'(38.7%)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음
 -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시장 불안'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음

< 경제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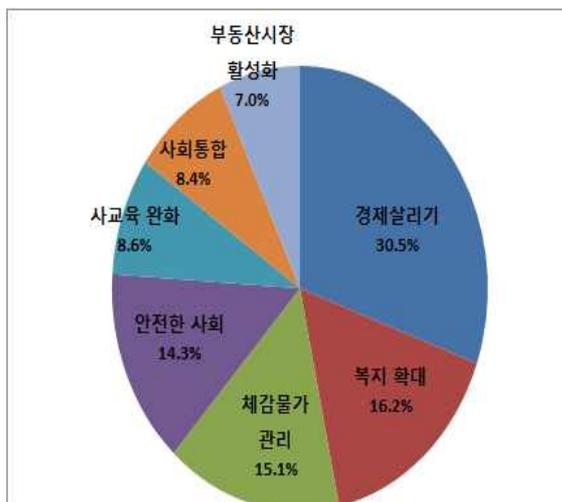
< 경제적 고통의 연령별 차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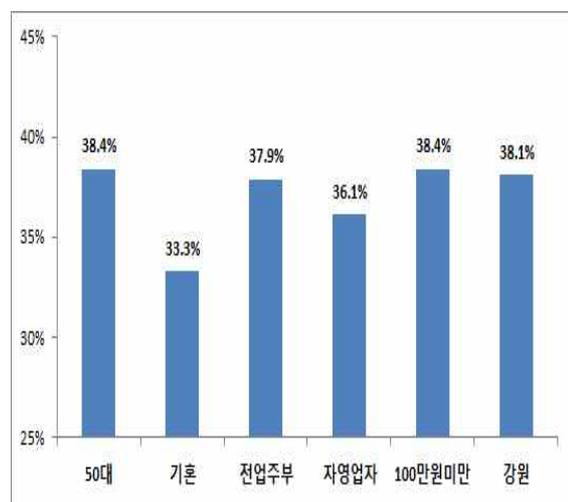
- (행복 증진 과제) 정부가 국민행복의 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경제 살리기'(30.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복지서비스 확대'(16.2%), '체감물가 관리'(15.1%), '안전한 사회'(14.3%) 등으로 나타남
- "국민행복의 증진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 살리기' 30.5%, '복지 서비스 확대' 16.2%, '체감물가 관리' 15.1%,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14.3%, '사교육 부담 완화' 8.6%, '사회통합 및 갈등 해소' 8.4%, '부동산 시장 활성화' 7.0%의 순으로 답변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경제 살리기'(31.7%)에 이어서 '안전한 사회'(17.3%)가 2번째로 중요한 과제라고 답변했으며, 남성들은 '안전한 사회'(11.3%)를 4번째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복지서비스'(22.5%)와 '안전한 사회'(20.4%)를 많이 선택했고, 30대는 '체감물가 관리'(19.6%), 40대는 '사교육 부담 완화'(16.0%), 50대 이상은 '경제 살리기'(38%)라는 응답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음
 -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는 '경제 살리기'(36.1%)와 '부동산시장 활성화'(12.9%)를, 학생들은 '안전한 사회'(19.5%)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함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부동산시장 활성화'(10.2%)에 대한 요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행복감 증진 위한 우선 과제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경제살리기' 응답률 높은 그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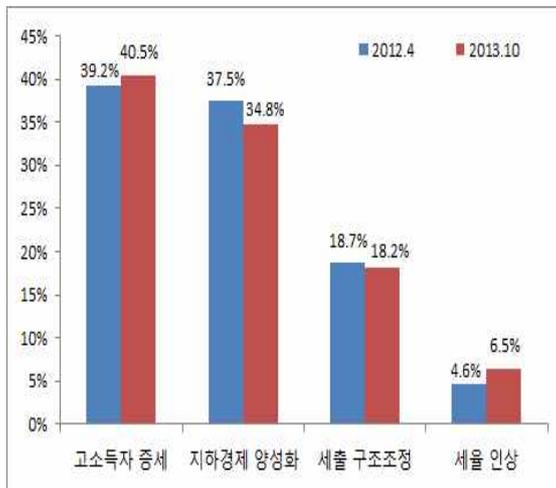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복지 재원 조달) 복지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고소득자 중심 세금 인상'(40.5%), '지하경제 양성화'(34.8%), '세출 구조조정'(18.2%), '세율 인상'(6.5%)의 순으로 응답하여, 뚝프(NOOMP)현상⁴⁾은 1년前과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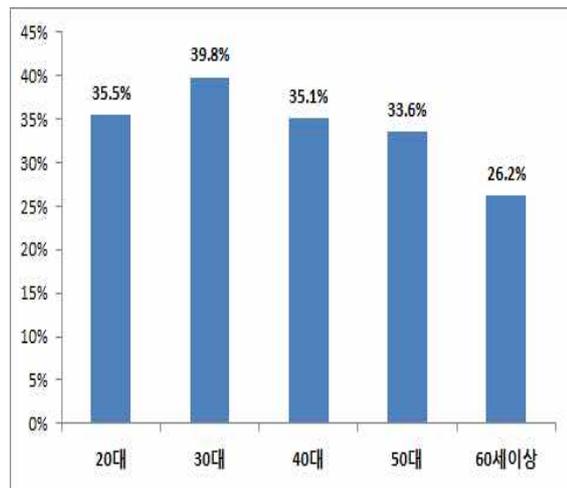
-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서 '고소득자 중심 세금 인상',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의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답변
 - 본인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율 인상'(전체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은 가장 나중(4순위)에 응답(6.5%)하여, 복지를 위한 세금 인상에 거부감이 상당함
 - '고소득자 중심 세금 인상'(40.5%)에 대한 응답은 호남(58.5%), 강원(50.0%), 부산/울산/경남(44.2%) 지역에서 높았음
 - '지하경제 양성화'(34.8%)에 대한 응답은 30대(39.8%)에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26.2%)으로 갈수록 낮아짐.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8.3%)가 가장 높았고,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더 높다는 점이 '특이'함
 - '세출 구조조정'(18.2%)에 대한 응답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져 60세 이상(24.1%)이 가장 높았으며, 농림어업 종사자(40.0%)와 전업주부(26.2%), 자영업자(24.2%)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 뚝프 현상 여전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지하경제 양성화의 연령별 응답률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4) 뚝프(NOOMP)란 'Not Out Of My Pocket'의 줄임말로써 '복지서비스의 강화는 찬성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가장 나중에 하고 싶다는 의미'. 일종의 '뚝비' 현상이 복지 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함. 현대경제연구원,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뚝프'(Not Out Of My Pocket)현상', 2012.4.2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

○ (선별적 복지 對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73.3%) 모델에 대한 선호가 '보편적 복지'(26.2%) 모델에 대한 선호보다 2배 이상 높았음

- 2가지 복지 모델 중 선택하게 한 결과,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보편적 복지'(26.2%)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선별적 복지'(73.3%)에 대한 선호가 훨씬 높았음

- '보편적 복지' (26.2%)에 대한 선호는 나이가 적을수록, 미혼일수록, 화이트칼라일수록, 호남/제주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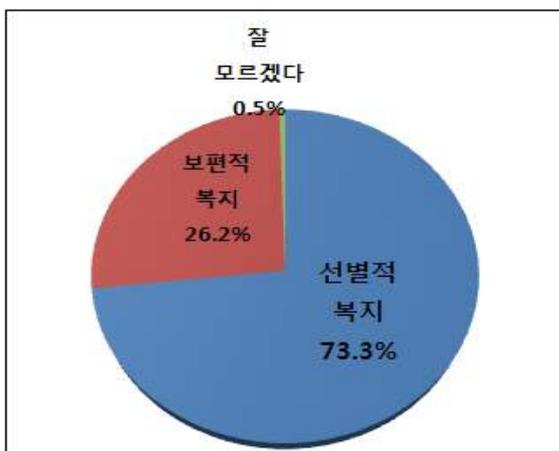
- '선별적 복지' (73.3%)에 대한 선호는 나이가 많을수록, 기혼일수록, 전업주부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선별적 복지'를 선택한 비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졌는데, 20대 64.7%, 30대 65.7%, 40대 77.6%, 50대 81.5%, 60세 이상의 경우 82.3%로 높아짐

· 결혼여부별로 보면, '선별적 복지'를 선택한 비율은 미혼의 경우 64.2%였으나, 기혼은 77.3%로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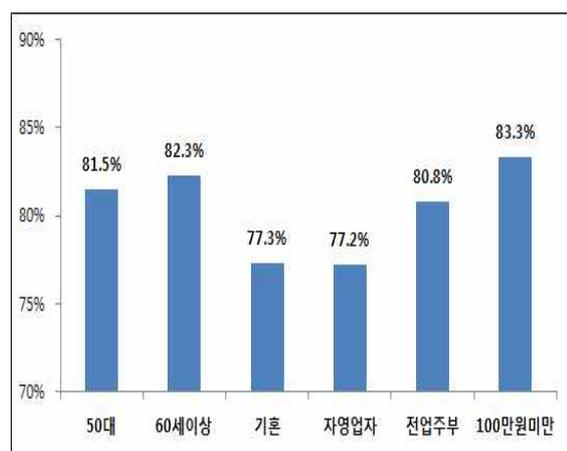
· 직업별로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선별적 복지' 선택 비율이 80.8%로 가장 높았으며, 화이트칼라가 68.8%로 가장 낮았음

< 선별적 복지 對 보편적 복지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선별적 복지 응답률 높은 그룹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복지-세금 현상 유지) 복지서비스와 세금을 ‘끌어 올리는 것’(37.6%) 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60.5%)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았음

- “복지 확대와 세금 인상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음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복지 유지, 세금 유지’ 60.5%, ‘복지 확대, 세금 인상’ 37.6%, ‘기타’ 1.9%의 순으로 답변함

· ‘복지 유지, 세금 유지’(60.5%)의 보수적 모델에 대한 지지는 남성(52.3%)보다는 여성(68.8%)이 더 높았으며, 호남(58.9%)이나 충청(56.4%), 인천/경기(56.0%)보다는 대구/경북(65.7%), 부산/울산/경남(66.3%)에서 더 높았음.

· 직업별로는 전업주부(64.6%)의 경우 ‘복지 유지, 세금 유지’(60.5%)의 보수적 모델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중산층 복원 과제) 중산층 복원을 위한 과제로서는 ‘일자리 창출’(38.7%)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중산층 복원을 위해 시급한 정책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일자리 창출’ 38.7%, ‘가계부채 부담 해소’ 20.1%,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완화’ 19.2%, ‘고용 안전망 강화’ 11.7%, ‘주거 관련 부담 완화’ 10.4%의 순으로 답변

· ‘일자리 창출’(38.7%)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57.6%)에서 가장 높았으며, 50대도 55.5%로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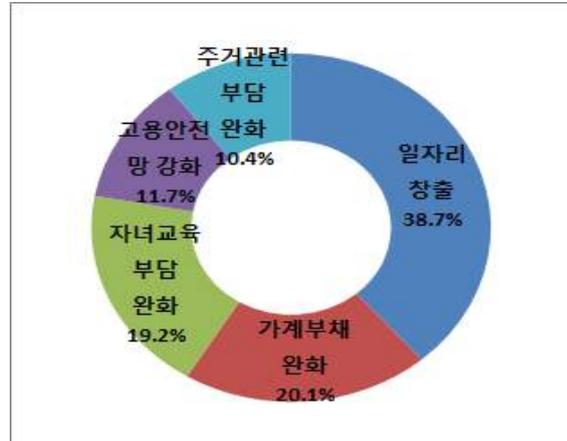
· ‘일자리 창출’(38.7%)에 대한 응답률은 전업주부(51.9%), 농림어업(46.7%), 무직/퇴직(46.9%), 자영업자(45.9%)와 학생(45.6%), 저소득층에서 높았음

< 복지-세금 현상 유지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중산층 복원 위한 우선 과제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3. 시사점

- 첫째, 일반적 행복감과 경제적 행복감이 소폭 증가했다는 것은 최근 경기선행지수의 개선 등 경기회복 추세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최근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넘어서는 등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행복감에도 일부 반영됨
- 둘째, 행복감 개선을 위해 경제 살리기와 경제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함
 - 국민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과제로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경제 살리기'였으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도 '경제적 여건'이었음
- 셋째, 세부 정책과제로서는 노후소득 개선, 체감물가 관리, 자녀양육 부담 완화, 고용 안정성 개선 등이 필요함
 - 경제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노후불안, 체감물가, 자녀양육 부담, 일자리 불안 등의 순으로 답변한 것을 참고하여 청년층은 물론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넷째,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선별적 복지'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의 복지 서비스 로드맵과 우선 순위 결정이 필요
 -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에 대한 지지도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의 2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확대될 복지서비스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경제연구본부 기업정책연구실장 김동열 (02-2072-6213, dykim@hri.co.kr)

<참고 1> 조사 개요

○ 개요

- 조사 기간 : 2013년 9월 30일 ~ 10월 6일 (7일간)
- 조사 방식 :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화설문을 통해 전국 1,006개 샘플을 수집
- 오차 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 3.09
- 조사 대상 :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 응답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이상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	500~
명	506명	500명	218명	233명	268명	146명	141명	66명	175명	208명	193명	140명	198명
%	50.3	49.7	21.7	23.2	26.6	14.5	14.0	6.7	17.9	21.2	19.7	14.3	20.2

구분	직업별							학력별				결혼유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학생	주부	농림 어업	무직/ 퇴직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기혼	미혼	기타
명	471명	96명	149명	79명	130명	15명	64명	71명	235명	638명	60명	675명	310명	20명
%	46.9	9.6	14.8	7.9	12.9	1.5	6.4	7.1	23.4	63.5	6.0	67.2	30.8	2.0

구분	지역별								지역특성별		
	서울	경기인천	충청	호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강원	제주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명	209명	273명	102명	107명	166명	105명	33명	11명	474명	465명	67명
%	20.8	27.1	10.1	10.6	16.5	10.4	3.3	1.1	47.1	46.2	6.7